

| 14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 코스닥              |  |  |
| 6008.81<br>(-26.54) | 823.88<br>(-13.15) |  |  |
| ↑ 금리 (미국 9년)        | ↓ 환율 (원·달러)        |  |  |
| 3.883<br>(+0.026)   | 1335.80<br>(-9.30) |  |  |



모디 총리 만난 현대 정의선

정의선(왼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3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그룹

## 동전주 퇴출 앞두고 법적분쟁 예고

금융당국, 상장사 40곳 관리종목 사유해소 못하면 22일부터 상폐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폐지 유예 퇴출대상 기업, 줄 소송 나설 듯

빠르면 오는 22일 ‘동전주’(주가 기준 미달) 퇴출 기업이 나온다. 법적 분쟁도 예고된다. 이미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터라 ‘동전주’ 퇴출 조치까지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주식 시장 체질 개선 대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가가 낮다고 기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33곳 등 총 40곳이다.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서 순차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전망이다.

동전주 퇴출 요건은 지난 7월 도입됐

다. 미국 나스닥의 1달러 미만(Penny Stocks) 주식 퇴출 규정과 유사한 구조다. 오는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시장에서는 ‘동전주’ 퇴출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전주 퇴출 요건이 ‘시총’을 문제삼은 법원 판단과 유사해서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거래소가 45거래일 기준이이 왜 타당한지 실증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전주 퇴출 기준도 같다. 다만 신설된 제도로 ‘조기 시행’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한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동전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이 액면합병 등을 통해 퇴출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퇴출 기업들이 나온다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미달은 관리종목 지정에 유지되 신규 상장 폐지 결정과 진행 중인 정리매매 절차 등

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동전주 관련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총과 주가만을 따져 상장폐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올 들어 지난달 4일까지 8개월간 주식 감자 또는 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85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8배로 늘었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유미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총, 주가 등 지표와 기업의 재무, 사업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큼 상장폐지 절차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의 쪽정이 속아내기 정책이 성공하면 코스닥이 오를 걸로 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코스닥 관련 A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정치적 업적 추진 과정에 코스닥 투자자들만 놀아난 꼴”이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李 대통령, 강훈식 사의표명 23일 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회와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9년생인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 신임 실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공무원 1만명 세종 대이동 ‘추가 수요’ 주택 임대 비상

세종 부동산, 매매 약세·전세 강세 임대차 시장 빠듯… 전·월세난 우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으로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 발표 직후 세종시 매매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에 매도를 미루려는 문기가 이어졌다. 반면 전·월세시장은 매물이 없어 단기 임대주택을 전전하는 공무원도 있다. 기존 임대차 시장마저 빠듯한 세종이 추가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9929명 규모다. 정부는 민간 임대공간을 활용하는 27개 기관·2995명부터 내년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세종 부동산시장은 매매는 약세지만 전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0.9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4.46% 올랐다. 매매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는 동안 임대차시장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세종정부청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기관 이전 발표 이후 이주 수요가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집주인의 호가 상

답이나 투자 문의가 먼저 들어오는 분위기다.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는 도담동도 램마을 아파트 인근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묻는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어진동 한뜰마을아파트 인근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급하게 집을 처분하려던 일부 집주인이 매도 시점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8억원을 생각하다 급매로 7억 5000만원까지 낮추려던 집주인이, 내년 기관 이전까지 기다리면 가격을 더 올려서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1차 이전 때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매물이 많이 있고, 공무원이 모두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1만 명 중 20%만 매매를 하더라도 세종이 워낙 소도시인 데다 물가가 올라서 1차 때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시장에서 가격 회복 기대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임대차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세종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939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522건)보다 38.3%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21.6%, 월세 매물은 52.4% 줄었다.

<2면에 계속>

/성채리 기자 cr56@



metro

## 美 국채금리 상승…韓 조달비용 상승 압박

해외 금리상승 압력, 국내시장 반영  
美 10년물 국채금리 상관계수 0.69%  
지난 8월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승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나타내면서 한국은행이 해외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조달비용 부담을 경계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국내 시장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공표한 10년물 국채금리는 5.21%다. 올해 첫 공표일인 1월 2일의 4.19%보다 1.02%포인트(p) 높다. 10월 9일의 5.24%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5%대를 이어갔다.

신현숙 한은 총재도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거버넌스 토크스’ 대담에서 대형 기술기업의 초장기 회사채 발행을 최근 장기금리 상승

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AI 산업의 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수요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국내 시장금리 동조화

해외 금리 상승이 국내 차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로는 시장금리다. 한은이 금융위기 이후 한·미 금리 인상기를 분석한 결과 10년물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0.69였다. 해당 기간 두 나라의 장기금리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보여준다. 국내 금리의 실제 변동 폭은 국내 경기·물가 전망과 채권 수급 등에도 좌우된다.

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국내 국채금리에 반영되면 회사채·은행채 등의 조달여건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차환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은행의 조달비용 상승은 신규 대출금리와 대출 갹신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靑, 5번째 ‘국민통합’ 유튜브…李 지적인 극단 주의 극복방안 모색  
▲한성숙 총리 “토착비리, 부정부패 고리 끊겠다…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사진 뉴스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민 신뢰 훼손”  
▲국방장관, 광주 제1전비 방문 “확고한 영공 대비태세·군공항 이전 완수” 당부

▲與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신천지’ 후속조치도”  
▲정부,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 검거…통장 불법 거래로 분양권 전매